

- 강의혁신을 위한 '강의 3.0' 선포식
- 대교협 2014 정시 대입정보박람회 개최
- 수시모집 지원횟수 검색 결과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ASSIST) 가처분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 시간강사법 개정 관련 현황
-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
-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현장점검
- 교육협력위원회 '청소년 진로설계 특강'
- 2013년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세미나
-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소식]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제2차 포럼 개최
- [국회 입법 동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8262), 사립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1908265)

“대학 강의 질 우리가 높인다.” 강의혁신 위한 ‘강의 3.0’ 선포



□ 대교협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대학의 강의 혁신을 위해 기획한 '강의 3.0' 선포식이 12월 4일(수)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의 3.0' 사업은 최상의 강의 모델을 찾아 대학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융합과 창조 교육을 지향하는 강의 혁신 사업이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으로부터 사업 지원을 받는 강원대, 울산대, 송실대, 신라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5개 사업단의 대표 책임 강의 교수들이 강의 혁신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강의3.0> 사업의 제1유형인 <기초교육 강의3.0>은 대학의 기초교양교육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책임강의자 및 공동강의자들(2개 대학 이상)이 참여하여 한 팀을 이뤄 교과목 공동 개발, 강의 내용 공동 연구, 교수-학습법 공유, 공동 강의와 공동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2014년도 <강의3.0> 사업의 시범 사업으로서 2013년도 겨울 계절 학기 시행 예정인 기초교양교과목을 대상으로 <기초교육 강의3.0> 사업을 기획, 공모한 바 있다. 사업 공모 결과 총 5개 팀이 선정되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으로부터 사업 지원금을 받게 되고 강의 결과물인 강의안 및 강의 동영상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홈페이지(konige.kr)와 KOCE에 공개될 예정이다.

□ 이번 선포식에서 남궁근 서울과기대 총장은 “학문 영역별로 단절되고 고립된 연구, 강의 분위기를 소통과 융합의 장으로 전환하고 대학생들에 교수 개인이 아닌 팀으로 구성된 우수한 강의자

들로 하여금 양질의 강의의 제공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학 강의의 질을 제고하며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은 “<강의3.0> 사업이야말로 기존의 단절된 상아탑의 벽을 허물고 최상의 강의 모델을 찾아 대학 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융합과 창조 지향의 교육을 이끄는 혁신적인 사업”임을 역설했다.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손동현 원장은 “교수자 간에, 전공 학과 간에, 나아가 대학들 간에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융합과 창의의 연구와 교육이 확산되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심포지엄의 2부에서는 <기초교육 강의3.0> 사업 선정단의 책임강의자들이 향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선정 사업단의 강의명과 책임강의자는 “기초학문과 프레젠테이션”(남기택, 강원대 외), “초급 중국어”(이상도, 울산대 외), “읽기와 쓰기”(차봉준, 숭실대 외), “사고와 표현”(김병홍, 신라대 외), “미분적분학2”(김태수, 서울과기대 외) 이다.

대교협 2014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 지방 거점대학, 수도권 주요 대학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16개 대학 참가 (2012년 107개교 → 2013년 116개교)
- 대학별 교수, 입학전문가 직접 참여 '수준별 수능 대비 일대일 맞춤형 상담' 실시
- 대학별 입학전문가 직접 참여하여 수준별 수능 대비 '일대일 맞춤형 상담' 실시
- 적성검사 및 상담, 장학상담, 입학사정관제 상담, 고른기회 전형 상담 등 특별상담 실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2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201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하고, 8일(일)까지 4일간 박람회 일정에 들어갔다.
 - 대교협 서거석 회장(전북대 총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올해 대학입학정보박람회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116개 대학이 참여했는데, 이는 최근의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 요구를 해소해주기 위한 대학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박람회 기간 진행되는 대학별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진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올해 15회째를 맞은 정시 대입정보박람회에는 지역 소재 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 등 역대 가장 많은 전국 116개 대학이 참여했다.

- 올해 참가대학이 대폭 증가한 것은 2014학년도 정시 대입전형에서 '수준별 수능'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고교 교사의 상담 요구가 높아졌으며,
- 대학 스스로 실질적이고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을 통해 무분별한 사교육 시장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험생들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참가교 현황 >

2010년 88개교 → 2011년 100개교 → 2012년 107개교 → 2013년 116개교

- 이번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여한 대학에서는 2014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수준별 수능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위하여 교수, 입학처 직원, 입학사정관 등 입학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일대일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한다.
- 특히, 박람회장에 직접 방문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기간 동안 대교협 'KCUE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 대학별 '2014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관련 주요사항'을 제공한다.
- 또한 이번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는 참가대학별 상담관뿐만 아니라 적성검사 상담, 장학 상담, 입학사정관제 상담, 고른기회 전형 상담 등 다양한 '상담관'을 설치·운영하여 진로·진학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가대학별 상담관	참가 대학별 1:1 맞춤형 상담
적성검사 상담관	온라인 적성검사 및 상담
입학정보 종합자료관	대입정보 관련 종합검색시스템 운영
진로진학 상담관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소속 상담교사 1:1 상담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 상담관	입학사정관 전형 상담, 고교-대학연계심화과정(UP) 상담
대입정보공시 및 고른기회전형 상담관	대학알리미 활용법 상담, 재외국민, 탈북주민 전형,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등 고른기회 전형 상담
장학금 상담관	육군본부 군 장학 상담

- 대교협 관계자는 “2014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총 모집인원 대비 33.7%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지만, 올해 수준별 수능이 처음 실시된 만큼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심이 매우 높아 박람회 기간(4일) 동안 관람객 수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11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서울지역 대학 등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16개 대학이 참여했고, 각 대학 입학전문가가 일대일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박람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전형 준비를 위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시모집 지원횟수 검색 결과

- 수시 6회 초과 지원 위반자 770명 예방 조치
- 1인당 수시 지원횟수 4.18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4학년도 수시모집 지원횟수 검색 결과, 수시 6회 초과 지원 위반자 770명에 대해 사전예방 조치를”고 4일 밝혔다.
-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초과한 전형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학입학이 무효화된다.
- 대교협은 수험생 대학진학 기회를 보호하고 대입전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시모집을 실시한 199개 대학에서 지원자료를 수합하여 총지원자 54만5,320명 중 770명의 수시지원 6회 초과자를 검출하고 해당 대학의 접수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대입지원방법 위반자를 사전예방했다.
- 또한, 수시모집 지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지원건수는 228만428건이었고 1인당 평균 지원횟수는 4.1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들에게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대입지원 정보서비스(applys.kcue.or.kr)에 접속하여 지원대학과 지원횟수, 대입지원방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대교협은 향후 2014학년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최종자료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여 대입지원방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공동원서접수시스템(ASSIST) 가치분 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 사업 추진 경과

- “대입 공공지원서 개발 및 원서접수시스템 개선 연구방법 개선” 정책연구 (‘10.4~’11.1)
 - ※ 영국의 원서접수기관(UCAS) 운영 현황
- 민간 대행업체를 통한 대입 공공지원서 적용(‘10. 7. 8.)
 - 대교협에서 대학의 의견을 받아 표준양식(유의사항,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을 만들고 각 대학은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원서접수
 - 강제성이 없어 대학에 따라 추가 변경해서 사용
- 대입원서지원시스템구축을 위한 BPR/ISP 추진(‘12.4~9)
 - 학생·대학의 편의성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입원서지원시스템구축 전략계획 수립
- 대학입학전형종합지원시스템(ASSIST) 구축 1단계 사업 입찰 (‘13. 9. 17 ~ 10. 18)

□ 사업 중단 가치분, 소송경과

- `13.10.11 -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금지 가치분 신청
- `13.10.17 - 1차 심문
- `13.10.23 - 2차 심문
- `13.11.28 -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 금지 가치분 법원 판결

□ 가치분 재판결과(법원판결 요지)

-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 및 대학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대입지원시스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는 대입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11.27.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전협의’란 대교협 및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구상안을 수립·결정한 후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 및 협의체에 통보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구상안 수립단계에서부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간의 입장 및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설득·대안제시 등의 조율과정을 거친 후 대교협 및 교육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는 실질적 협의절차’를 의미함

-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는 ‘사전협의’의 의미를 ‘사전동의’ 또는 ‘사전합의’라고 주장하나, 법원은 ‘사전협의’를 ‘사전동의’ 또는 ‘사전합의’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향후 구축사업 추진 방향

-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가치분 결과 수용
- 구상안 수립단계부터 상호간의 입장 및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설득·대안제시 등의 조율과정을 거친 후 대교협 및 교육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는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
- 학생·학부모를 위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간단하고 편리한 대학입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 마련 구축

윤관석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7894) 발의(11.20)

시간강사법 개정 관련 현황

□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법률 개정안(이하 시간강사법)을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11.12)하였으나 201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법안이 국회를 통과(‘12.11)

- 국회에 강사제도 관련 입장 전달(‘13.3.29) :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배려, 임용기간 1년 이상 및 소청권 부여 등에 대한 재검토 등
- 시간강사법 재논의 건의문 발표(‘13.6.27, 하계총장세미나)
- 국회에 시간강사법 재논의 의견 전달(‘13.7.11, ‘13.8.7)
-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시간강사법 개정을 위한 의견 전달(‘13.7.31, ‘13.8.28)
-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시간강사법 개정 의견 교환(‘13.9.3)

□ 대교협 : 시간강사 제도 설문조사 수행(‘13.6)

- 설문조사 결과, 개선요구사항 1순위는 강사로 인상(46.6%· 다음으로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14.0%)과 강의기회 확대(13.8%)를 요구한 반면 소청권 보장을 요구하는 강사는 0.07%에 불과함
- ※ 대교협이 202개 대학의 전체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사 10,015명(4년제 대학 시간강사의 약 26%)가 응답

□ 교육부 :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3.9.11)

- 임용 및 재임용 절차 관련 내용, 교원확보를 산정시 강사 제외, 자격기준 등 내용 포함
- ※ 고등교육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 임용 절차 관련 :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심사단계, 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
- 재임용 절차 관련 :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
- 교원확보를 산정시 강사 제외 :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등을 사유로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음
- 자격기준 :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

□ 강사법 시행 2년 재유예 입법발의(민주당 윤관석 의원)

- 발의 일자 : 2013. 11. 20
- 발의자 : 윤관석의원 등 13인(김상희, 김춘진, 김태년,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안민석, 우원식, 유기홍, 윤관석, 정세균, 정진후)
- 입법 내용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7894)

대학의 시간강사는 실질적인 교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심각한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소위 ‘시간강사법(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된 고등교육법 일부)’은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또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원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원 간 차별을 고착화할 우려가 높음.

더욱이 2014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의 시간강사 해고사태가 예상되어 문제가 심각함. 이 때문에 처우개선의 수혜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음. 아울러 대학의 행정당국도 행·재정상 준비도 미흡함.

따라서, 입법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시간강사법의 시행을 상당 기간 유예하고,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해야 할 것임. 이에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함(안 부칙 제1조).

※ 부칙(법률 제112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새누리당 박성호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발의를 위하여 의원들의 발의 동의를 받았으나, 윤관석의원이 먼저 발의함에 따라 미발의

□ 향후 전망

- 여·야 및 관련 단체 모두 동개정안에 대해 동의·공감하고 있고, 여·야간에 연말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올해 중 고등교육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

국립대학 기성회비 문제

□ 기성회비 개요

- 근거
 - 최초 근거 : 1963년 제정된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
 - 현재 근거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 관리규정
 - ※ 사립대는 2000년 폐지
 - ※ 감사원('02, '04, '08년), 국민권익위원회('08, '11년) 등 개선 권고

□ 기성회비 반환소송 현황

- 2010년 1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제기
 -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6부는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
 - 2013년 11월 서울고법 민사11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 10명이 국가와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
 - 2013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심은 방송통신대 기성회비 반환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1인당 79만2500~396만7000원 반환)
- 서울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인단 '스누개쉬백'은 9월 10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1차 설명회를 열고 소송 참여 조건, 소송 금액 등을 소개

□ 정부·여당의 대책

-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 기성회비 징수 근거에 대한 법적 논란 해소 등 기성회회계 제도의 근본적 해결 모색
 - 국고 일반회계와 비국고 기성회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
 - 회계별 칸막이를 없애고 복식부기방식으로 회계처리토록 하여 효율성, 투명성 제고
 - ※ 『국립대학재정회계법』 : 새누리당 민병주의원이 교육부와 안을 조율하여 대표 발의(2012.7),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중

□ 현재 상황

- 교육부는 항소심 패소후, 대법원 상고 준비중이며 향후 별도 TF 구성 예정 등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을 위해 총력 대처
- 민주당은 11.13(수) 의원 워크숍을 통해 별도의 법(국립대학지원법 등)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예정)
 - 기성회계 폐지와 연계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되, 대학의 책임, 국가의 관리강화 등 방향으로 입안 예상
- 경북대 등 학생회를 중심으로 『국립대학재정회계법』 반대 움직임
 - 기성회계 폐지와 그 만큼의 등록금 인하 요구

□ 향후 전망 및 대처방향

- 여야의 정치적 대립 및 대학정책에 대한 시각 상충 등으로 법 제정에 시간이 걸릴 듯 함
-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하나, 민주당 발의 예정안에 대한 검토와 지원 등 다각도로 대처해나가야 함

대학글로벌현장학습 현장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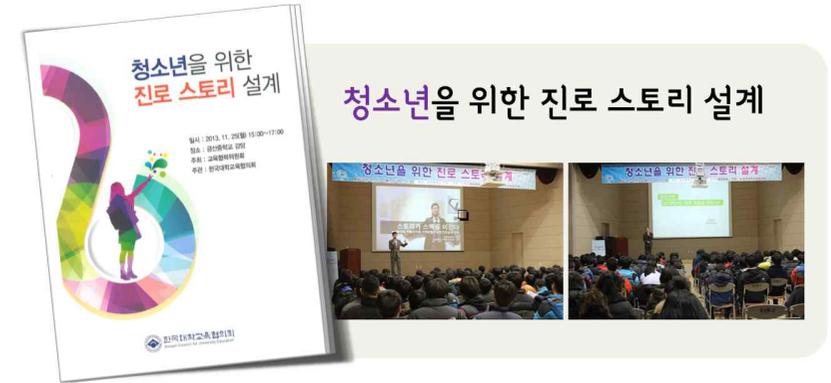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월 17일(일)~21일(목) 정부해외인턴사업 국외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대교협은 대학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현장점검은 신성장동력분야로 독일지역에 파견된 인턴학생의 근무여건과 생활환경 점검, 인턴기관 의견 수렴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 이번 현장 점검시 방문기관은 한국화학융합연구원(KTR) 독일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유럽연구소이다. 양 기관 모두 신성장동력분야의 인턴기관이며 2명의 학생이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교협은 각 기관 인턴학생의 근무여건 및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양질의 인턴파견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의 인턴파견 확대를 위하여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정]

교육협력위원회 '청소년 진로설계 특강'

- 대교협 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설계 지원방안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진로설계 특강은 충남 금산중학교와 전북 오송중학교에서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11월 25일, 11월 29일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 이번 특강에서는 중양대 강태중 교수와 MYSC의 김정태 이사가 참여하여 '2017년 대입전형의 변화'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내용으로 충남과 전북지역의 중학생과 학부모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 향후 교육협력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 청소년의 진로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세미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입학사정관제 우수 연구보고서 공유를 통한 연구성과의 현장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교육 영향평가', '입학사정관제 종단연구', '입학사정관 전형 개선 연구', '고교-대학 연계 및 추수지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제로 모두 14개 대학에서 참여하여 주제별 발표와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소식]

창조경제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제2차 포럼」 개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창조경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제2차 포럼」을 11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였다.

*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서남수 장관은 축사를 통해,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들이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기업과 가족회사 협약을 맺어 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추진하는 등 대학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교육부의 대표적 사업이라고 소개하였다.
- 또한, 우리 고등교육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의 초청강연에서

- 박철우 교수(한국산업기술대)가 창조경제 관점에서 지역산업 육성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역산업과 지원체계의 효율적 연계, 지역인재가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HRD 생태계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 최규옥 대표(오스탐임플란트)는 치과임플란트를 제공하는 부산소재 의료기기 업체로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는 편견과 의료기기 개발 사업의 특수성으로 사업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인근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회사가 성장*하였다고 소개하였다.

* 매출액 기준 아시아태평양 1위, 세계 6위 기업 : 29억원('06) → 920억원('12)

□ 패널토론에 나선 토론자들은 대학과 기업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의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면서, 가족회사 협약을 맺은 지역기업

들과 현장실습 지원 12,204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참여 21,691건, 취업교육 지원 26,685건, 캡스톤디자인 지원 7,619건 등 협력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나, 산학공동연구 참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아울러, 실제 지역에서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성공 기업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기업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교육부는 이번 포럼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들에게 창조경제 구현과 지역발전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 추진할 고등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 동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62)

○ 발의자 및 발의일자

안민석의원 등 10인(2013.12.3)

(김성곤 김현미 박주선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양승조 윤관석 윤호중 이낙연)

○ 입법내용

국가장학금 2유형에 책정되는 예산을 정부가 직접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성격을 변경하고, '지원금'을 받는 대학은 일정 수준 이하로 등록금을 받도록 하되, 정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여 지원금을 증액해가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임(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65)

○ 발의자 및 발의일자

강은희의원 등 10인(2013.12.3)

(강은희 김성찬 박명재 박인숙 서상기 손인춘 신경림 안종범 원유철 이강후)

○ 입법내용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학교운영에 관한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

‘주간대학교육’ 구독신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주간대학교육’ 발간하여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한 주간의 대교협 동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소식, 국회 입법 동향, 고등교육 정책 토론 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간대학교육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교협 대외협력홍보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919-3825)
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